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거센데 방제 여력은 바닥

전남광주 동부권서 시작...중·서부 전지역까지 번져

올해 22개 지자체 52만여 그루 피해...3년새 8배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방제 역량과 예산 확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예찰 대상지 확대, 방제 예산의 변동성, 항공방제 중단 등이 겹치면서 기존 방제체계만으로는 확산세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등 전남광주 22개 시·군·군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 규모는 51만9788그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여수시 등 15개 시·군·군 6만2400그루, 지난해 18개 시·군·군 15만73그루 등에 이어 대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2년 전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합특별시는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수종 전환과 권역별 방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장기적 산림 보호와 유지에 나서고 있다.

집단·반복 발생지역의 수종 전환에 나서 지난해 67ha에서 올해 690ha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여수 등 8개 시·군 37개소에서 341ha의 수종 전환을 완료했다.

권역별 방어선 구축에도 나서 광양·구례·하동을 잇는 섬진강벨트에서는 광역 경계지역 공동예찰과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공동방제를 진행하고 있고, 보성에는 동부권인 여수·순천·광양에서 서부권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 구축, 나주·함평·영암 등 서남부권에서도 확산 차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확산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피해고사목 발생분수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에서 ‘극심’에 이어 두번째로 심각한 ‘심(3만~5만 그루)’ 지역에 동부권인 여수와 순천 광양뿐만 아니라 중부권인 장성까지 포함되면서 피해 지역이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재선충병에서 자유로운 곳은 동구,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4곳 뿐이다.

올해 피해 가운데 감염목은 15만4890그루, 감염 우려목은 36만4898그루에 달한다. 단순히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뿐 아니라 주변 확산 가능성이 있는 나무까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방제 작업량은 상당한 수준이다.

확산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연평균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소나무류의 생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유리한 생태 조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제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확산 요인으로 지목된다. 피해 고사목 수와 그루 수에 따라 매년 예산이 변동되면서 장기적인 방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예찰 대상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방제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의 확산을 선제적으

로 차단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면적에 대한 방제 방안 중 하나인 항공방제가 환경단체와 양봉산업계 등의 반발로 감소됐고, 2023년부터는 아예 중단되면서 재선충병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한 산림 병해충 문제를 넘어 산림 생태계와 지역 경관, 산림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급증하는 피해 규모에 걸맞은 방제 역량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예찰과 수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무형유산 공개행사 개막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4일 동구 전통문화관 무형유산 전수관에서 열린 ‘2026 무형유산 공개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기능보유자들의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광주 등 호우 피해액 100억원 확정

복구비 등 154억원 투입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으로 확정돼 복구에 154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재난 지원금 34억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이 침수된 세대에는 350만원씩 지급되며,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

난지원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일반재난지역은 국제 납부유예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7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광주 영광군에 누적 579.5mm, 충남 부여군에 284.5mm 등의 비가 쏟아지는 등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통합 인센티브 20조’ 어디에 쓸까...국민 제안 20건 선정

352건 중 전문가 심사 거쳐...첨단산업·광역교통 담겨
조직개편 ‘20조 기획’ 부서 신설...지원 재원 설계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년간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통합지원금 활용처를 찾기 위한 국민 제안을 통해 20건을 선정했다.

시는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교통, 일자리 등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정책·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민공동체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 352건에 대한 1차 사전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난 1일 20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정부지원금

20조원의 활용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정부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전남광주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이 중 3조 5000억원 규모인 미래대응기금으로, 2조 8500억원은 통합지방정부기금 명목에, 6500억원은 통합특별시 기관 사무 지원 명목으로 내려온다.

통합지방정부기금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우수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광역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개발 △정주 여건 개선, 행정통합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조 5000억원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으로 사용처가 정해졌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에서는 최첨단 산업 전환과 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대거 접수됐다.

우수제안으로는 ‘전남광주 제조 AX 공급-수요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및 미래차 전환 가속화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ESS 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 DX·AX 기반 공정혁신 및 스마트플랜트 전환’, ‘광양항 LNG 병커링 인센티브 지원 제도 시행 권의문’ 등이 선정됐다.

전남광주 60분 생활권 구축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다수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심사위원들은 ‘광주·전남 관광순환열차 구축’, ‘여수·순천·광양 동부권 매가시 티 광역 철도망(트램) 구축’ 등을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했다.

광주권역이 올해 시행을 앞둔 자율주행과 연계해 화순·광주 첨단산단 자율주행 데이터 실증노선을 편입하자는 제안도 우수제안으로 뽑혔다.

이밖에 ‘육아기 경력단절 여성 및 신종년 여성의 4시간 정규직 근로 정책 제언’, ‘청년근로자 정착지원제 도입 요청’, ‘타투와 모발이식에 대한 의료특구 지정’ 등이 20건에 포함됐다.

시는 20조 포럼의 우수제안을 단순 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전담부서에서 정책화나 사업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 민원메신저, 광주까지 활동영역 확대

통합 후 첫 연찬회...14기 운영·권역별 활동방안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 민원메신저 활동영역을 광주까지 확대한다.

민원메신저는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 행정에 전달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창구다. 시는 이를 확대해 전남광주 전역을 아우르는 시민현장 소통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거제·통영·여수 일원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민원메신저 연찬회’를 지난 2일까지 이틀간 열며 제14기 운영방향과 권역별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연찬회에선 확대된 활동영역에 맞는 민원메신저 운영 방향과 권역별 활동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민원메신저 활동교

육과 자유토의, 권역별 발전 방안 발표 등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첫날에는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매미성 등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통합특별시 출범과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둘째 날에는 통영 동포광 벽화마을과 중앙시장 등을 방문한 뒤 여수로 이동해 여수세계섬박람회 플로깅과 박람회 관람에 참여하며 박람회 홍보에 힘을 보탰다.

강경문 광주특별시 행복소통실장은 “14기에는 광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행정에 전달하는 든든한 가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마음건강 돌봐요’...‘정신건강주간’ 운영

16일 광주청사서 기념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를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문화행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 행사는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27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7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 한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팸플리엄 천천클래식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연 소장이 ‘내 감정을 마주할 때 찾아오는 자유’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전한다.

행사장 앞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홍보와 함께 알코올 등 중독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안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 정신건강 문화행사 공식 누리집(https://gmhc.campaigns.me) 또는 전화(062-600-1941~4)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지난 2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곳곳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행사가 열린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농어업 FTA 피해액 매년 8300억...정부 예측 벗어나”

서삼석 의원, 15년간 체결한 FTA 피해영향분석 전수조사
CPTPP 개방률 평균 99.4%...이전 협정보다 큰 피해 우려

최근 15년간 정부가 체결한 국가 간 FTA(자유무역협정)의 농어업 분야 연간 피해액이 8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FTA협정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체결된 28개의 FTA 협정 중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돼 6개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연간 피해액이 83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FTA 협정 체결 이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5조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협정에 대해 농어업인 지원 및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피해액 예측을 위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는 생산액 감소 등의 실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이 수립된 FTA 협정은 미



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6건이다.

정부가 이들 국가와 협정 체결 전 국회에 보고한 사전 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협정 피해액은 6812억 원, 호주와 협정 피해액은 721억 원 등 매년 80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협정 이후 정부의 실제 피해액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정부의 예측보다 매년 277억 원 더 많은 832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미 FTA의 피해액은 예측보다 매년 225억 원이 많은 7037억 원, 호주와의 협정에

선 매년 43억 원이 더 늘어난 764억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시 사전영향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출과 농어업인 지원·피해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이 수립된 FTA 6개국의 평균 개방률은 89.5%인 반면, CPTPP에 가입된 12개국의 개방률은 99.4%에 달해 철저한 사전 피해 예측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 의원은 “CPTPP 가입을 앞두고 또 다시 부실한 예측으로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